

# 전시·오락·야생 동물의 복지

이형주(팀장, 동물자유연대)

## 1. 배경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오염으로 인한 서식지의 감소, 상업적 이용을 위한 수렵·밀렵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야생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야생에서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이하 CITES)’을 제정하고, 국제포경위원회에서는 1986년 모라토리엄으로 고래 포경을 금지하는 등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명 다양성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서식지에서의 연구와 야생 개체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과거 동물원의 역할이라고 여겨졌던 교육적 기능과 종 보존의 기능은 점점 축소 평가되고 있고, 다양한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시 시설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고찰이 이뤄지고 있으며, 서커스와 동물쇼 등 동물의 본능을 제압하는 오락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전혀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정부는 멸종위기종인 고래류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기는커녕 법망에 구멍을 만들어 사실상 고래 포획을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에 대해서는 한 편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복원사업을 실시하면서 한 편으로는 천 마리의 사육곰이 철창에 갇혀 쓸개즙을 위해 도축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고 있다. 동물학대적 요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동물 전시 시설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전시동물이 인도적 처우와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현행법상 전무한 실정이다.

## 2. 정책 제안

### 1) 전시·오락 동물의 복지

우리나라에서 동물원 동물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전시동물의 복지를 보장하는 조항은 없다. 현행 동물보호법의 모호한 학대 규정은 생태적 습성과 맞지 않는 부적합한 사육과 관리, 좁은 공간에 장시간 전시되는 환경에서 노출되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동물원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대부분이 야생동물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동물들을 관리하는 데 적용될 수 있을 듯한 환경부 소관의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우리나라 야생동물(wild animals)에 대한 관리와 보호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나, 동물원 동물(captive animals)에 대해서는 동물 수출입, 양도, 폐사 신고 등 동물 이력과 수출입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동물의 관리나 보호에 대한 어떤 조항도 찾아볼 수 없다.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의 동물원관리 규칙만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의 운영규칙을 대신하고 있거나 이에 준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영국의 경우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에 동물원 동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물원 면허법(Zoo Licensing Acts)’에 의거해 동물원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에게만 면허를 주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협회 인증 제도가 발달해 있으며, 인증을 위한 각종 노력과 심사(inspection)가 동물원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에 동물원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인 또는 민간기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해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들 중 어디에도 동물원 설립 시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시설, 사육, 전시 환경뿐 아니라 종의 특성을 고려해 정상적인 활동 형태와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허가 기준과 운영 지침이 하루 빨리 정립돼야 한다.

대형 동물원의 경우 적자를 면하기 위해 동물을 번식시켜 소규모 영세 동물원에 판매해 동물이 더욱더 열악한 사육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원 시설 내 번식은 제한된 사육 시설 규모 때문에 동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동물원 동물의 소유, 양도, 판매, 폐사 기록을 의무화하고 상업적 이용을 위한 무분별한 번식을 규제해야 한다.

또한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해를 가하는 오락성 산업을 금지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동물복지의식이 확산되면서 서커스, 투우 등 오랜 전통을 가진 오락 산업도 점차 금지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돌고래, 원숭이 등 높은 지능을 가진 동물들을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켜 공연을 하는 쇼 전문 업체가 성행하며, 동물에게 질병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체험 전시가 지자체 운영 동물원에서부터 영세 이동 동물원에서까지 성행하고 있다. 또한 소, 말 등의 농장동물이 관광 목적 이동수단이나 소싸움 등 오락 산업에 사용되는 점에 대해서도 고찰이 필요하다.

## 2) 고래포획 금지

정부는 지난 7월 파나마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에서 ‘과학적 목적의 포경을 합법화하겠다’고 발표해 전 세계를 경악케 했다. 국제 여론과 국민의 비난이 빗발치자, 정부는 ‘어업 종사자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사실상 12월 3일 IWC에 과학포경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족 자원 감소의 원인이 고래 개체수의 증가’라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농림수산부는 ‘1986년 모라토리움 시행 이후 국내 어업인들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속음포경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고래가 어족 자원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어족 자원 감소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며, 이는 고래 포획이 아닌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고래에 대한 연구는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의 국가에서 ‘비살상, 비포획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배설물 분석, 조직 샘플 채취를 통한 지방산 분석 등이 널리 쓰이고 있으며, 호주환경부는 이 외에도 음향연구방법, 분자 연구 방법(molecular), 유전자 분석, 위성 장치 부착 등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최신기술을 이용한 비살상 연구기술은 고래를 직접 잡아 죽이는 전근대적방식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연구 결과 또한 더 정확하다는 것이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심지어 호주정부에서는 한국이 과학 연구를 위해 고래를 불가피하게 죽여야 한다면 한국 과학자들을 초청해 비살상 연구기술을 전수해주겠다는 발언까지 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90마리에 달하는 고래류가 혼획된다. 정 죽은 고래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한다면 이미 혼획된 개체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시대역행적인 과학포경 계획을 공식 철회하고 고래류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1년 1월 개정된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 4조 2에서는 과학연구용 및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을 허가하고 있다.

고래류의 포획은 그 포획 과정이 본질적으로 비인도적이며, 무리생활을 하는 돌고래의 경우 포획된 개체뿐 아니라 개체가 속했던 무리 전체에 사회적 균열을 가져온다. 하루에 100km를 이동하며 수심 500m를 다이빙하는 돌고래가 미국 수족관의 최소 규격인 9m x 9m x 1.8m의 수족관 안에 갇혔을 때 정상적인 운동량을 위해 수족관을 매일 1,700번 회전해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수족관 돌고래는 야생 돌고래보다 6배 높은 치사율을 보이며, 지난 20년 동안 인공 시설에서 죽은 해양 포유류는 3,850마리에 이른다.

정부는 모든 고래류의 포획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해양포유류의 전시와 사육까지 규제해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류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수역에는 약 35종의 고래가 서식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고래인 밍크고래는 J-stock으로 불리는 멸종위기 개체군으로 분류되는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90마리의 고래류가 어망에 우연히 걸려 죽는다. 이는 미국, 호주 등의 국가 혼획률에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혼획을 막으려는 근본적인 노력 없이, 혼획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로 간주해서 혼획된 고래의 유통을 간소화하기 위한 현행제도는 고래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 포경까지 기승을 부리는 원인을 제공한다.

혼획을 줄이기 위해서 음향장치, 어망 구조 개선 등의 기술을 도입하고, 혼획된 고래의 방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민 상대 교육과 구체화된 포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불법포경과 고래의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3) 곰 사육 폐지

1981년 정부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재수출 목적으로 500여마리의 곰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수입했다. 그 이후 1985년 CITES 가입으로 곰의 수입 수출이 중단되면서 곰은 농가에 갇힌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농가의 민원으로 정부는 1999년 25년 된 곰을 도축해 쓸개즙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고, 이후 도축 연한을 25년에서 10년으로 낮췄다. 2012년 현재 전국 54개 농가에서 1,000마리의 곰이 사육되고 있다. 열악한 사육환경과 야생동물인 곰 사육 자체의 비인도성 외에도, 탈출한 곰이 사람을 공격하고 결국에는 사살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채로 쓸개즙을 채취하거나 곰의 부산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2차적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

한국의 곰 사육 정책은 세계야생동물협회,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국제단체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 2012년 9월 제주도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웅담 채취 목적의 곰 사육 폐지’ 발의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했다. 한국 국민들의 89.5%는 웅담 채취 목적의 곰 사육에 반대하며, 곰 사육 농가의 80%는 정부에서 적당한 보상을 해준다면 곰 사육의 단계적 폐지에 동의하고 있다.

곰 사육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사육곰 농가의 증식 금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불임 수술을 통해 증식을 막는 동시에 현존하는 개체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매입과 향후 관리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가 2013년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불법적인 사육의 잔재를 막기 위해서 곰 상품화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